

언론의 자유와 증오 발언: 그 교차점은 무엇일까요?

책임의 한계 법적 고지: 이 문서는 법적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오리건 주와 미국에서 증오 발언을 불법화하는 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이드로 마련된 것입니다. 이 문서는 Civil Rights Unit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은 기존 법률을 바탕으로 하는 정보를 취합한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헌법상 보호 장치

미국ⁱ과 오리건 주ⁱⁱ 헌법에서는 개인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 민간 조직 또는 사람들에게 의한 간섭 또는 보복이 아닌, **정부의 간섭 및 보복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보호 대상과 자유로운 발언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데 따른 복잡성을 감안할 때, **보호 대상이 아닌 발언**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보호 대상이 아닌 발언(이 경우 정부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증(선서한 상태에서 거짓을 말하는 것)
- 내부자 거래 정보 공유ⁱⁱⁱ
- 구두 비방(^{iv}구두 형태의 명예훼손적 발언)
- 서면 비방^v (서면 형태의 명예훼손적 발언)
- 미국 대법원과 제9 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 의한 “진정한 협박”의 정의^{vi}
- 다음에 해당하는 폭력/공황 상태/폭동/무법적 행동의 조장^{vii}:
 - 임박했고^{viii}
 - 발생 가능성이 높음^{ix}.
- 다른 누군가의 재산을 파손하는 낙서
- 상업적 발언을 통한 잘못된 정보(예: 기업이 소비자에 피해를 초래하는 방식으로 호도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기성 발언을 하거나, 틀린 주장을 하는 경우)
- 아동 포르노^x

- 불법 복제 및 표절^{xi}

증오 발언이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증오 발언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민족적 배경, 종교,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또는 장애를 이유로 특정 사람 또는 사람들을 구체적인 표적으로 삼아 학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리건 주에서 증오 발언은 실제 또는 인식상의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또는 장애와 관련된 발언인 경우 [ORS 147.380](#)에 따라 "편견 사건"으로 간주됩니다.

증오 발언과 편견 사건은 범죄 행위는 아닙니다. 법 집행 당국에는 증오 발언이나 편견 사건을 저지르는 사람을 중지시키거나, 침묵시키거나,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특정 환경에서 저지르는 증오 발언과 편견 사건은 민권 침해(Civil Rights Violation)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 의료 서비스 상황에서, 교내에서, 사업장 또는 도서관, 또는 심지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xii}, 민간 부문 고용주 및 학교 등과 같은 민간 조직의 경우 증오 발언을 포함해 특정 발언을 금지하는 이용 약관을 갖추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는 일반적으로 미국 및 오리건 주 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오 발언과 편견 사건은 언제든지 [오리건 주 편견 대응 핫라인\(Bias Response Hotline\)](#)으로 신고 가능하며, 대상이 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다음 단계 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전단지 배포는 어떤가요?

오리건 주의 소도시와 동네들 중에는 반유대주의 및 그 외 불쾌한 메시지를 현관문, 자동차 앞유리, 우편함 및 진입로에 뿌리는 대규모 전단지 배포 캠페인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소도시의 경우 반려견 분실 포스터, 정치 후보자 정보지, 가게 오픈 알림, 살림 정리 세일, 표적/증오 메시지 등을 포함해 *일체 모든* 전단지 배포를 금지하는 법령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법령 위반이 범죄 행위는 아니지만, 배포자에 대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 집행 당국에 신고하는 것은 전단지 배포가 오리건 주의 2급 편견 범죄 법규([ORS 166.155](#))에 따라 범법 행위일 수 있는 경우

증거 수집 및 수사에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오리건 주 편견 대응 핫라인으로 신고](#)해 데이터 추적, 지원, 안전 계획 수립 및 추가적인 리소스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 및 리소스

옹호 불가 행동의 옹호

미국과 오리건 주 시민들은 연방 헌법 및 주 헌법에 강력한 언론의 자유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시민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위해 "옹호 불가 행동을 옹호"하고 증오 범죄를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누가 결정할 것인가? 본질적으로 선출직 정치인으로 정치적 소속이 있는 경우가 많은 정부 관료가 어떤 발언을 허용할 것인가와 관련해 기준을 수립하고 재량 판단을 내리는 일을 맡는다면 어떤 정치적 인물이 선출되는가에 따라 이러한 제한 기준이 바뀔 것이고, 반대 의견을 침묵시키거나 검열하는 권한은 반체제 인사에 대한 무기로 사용될 것입니다. ^{xiii}

언론의 자유 대법원 판례

오리건 주 대법원과 미국 대법원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증오 발언을 언론의 자유로 옹호한 바 있습니다. 로스쿨에는 전적으로 언론의 자유 판례만 논의하는 수업도 있지만 다음 두 가지 판례는 반드시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Skokie

가장 유명한 언론의 자유 판례는 *Skokie*, 또는 미국 국가사회당(NSPA), 대. Skokie 마을, 432 U.S. 43 (1977) 판례입니다. 신나치주의 단체인 NSPA는 나치의 표식인 스와스티카가 새겨진 완장을 차고 주로 유대인들과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주의적, 종교적 증오를 퍼뜨리면서 정기적으로 '화이트 파워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스코키 마을은 이러한 시위와 그에 이어지는 증오 발언을 금지하기 위해 법원 명령을 신청하고 이러한 목적을 가진 법령을 지정했습니다. 미국 대법원(USSC)은 최종적으로 "주 당국이 수정 헌법 제1조에 따른 권리를 제약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즉각적인 상고 심사를 포함한 엄격한 절차상의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그러한 심사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주 당국은 반드시 대신 임시 중지를 허용해야 한다.

일리노이 주 대법원의 명령은 그러한 권리의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xiv}

Johnson

오리건 주에서 있었던 주 정부 대. Johnson, 345 Or. 190,191 P.3d 665은 오리건 주 대법원의 2008년 판결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ORS 166.065(1)(a)(B)의 오리건 주 괴롭힘 법규의 한 조항을 삭제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도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 이는 괴롭힘이라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a)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귀찮게 하는 것:

(B) 폭력적인 반응을 의도하고 폭력적인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방식으로 학대적 표현 또는 제스처를 사용해 그러한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

피의자인 Johnson은 범죄 피해자 2명의 차 뒤를 5분간 계속 붙어서 따라가면서 동성애자 혐오적, 반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비방하는 말을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말로 위협하거나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들 중 한 명의 폭력적인 반응을 유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오리건 주 대법원(ORSC)은 "폭력 행위가 임박한 경우가 아니면 폭력을 의도하고 폭력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발언이라 하더라도 불법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ORSC는 현행 법률은 "너무 많은 보호 대상 발언을 적용 범위 안으로 끌어 넣고 있어... 도전을 견뎌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피의자 Johnson의 "표현이 불쾌할 수 있었겠지만... 주 정부는 형법이라는 몽둥이로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모두 억압할 수는 없다... 입법부에서 발언으로 유발되는 폭력을 막으려고 노력하고는 있으나,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보호 대상 발언을 불법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xv}

언론의 자유에 관해 읽고 들을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

ACLU의 At Liberty 팟캐스트,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Ask an Expert\):](#)

[언론의 자유란 무엇인가\(What Is Free Speech\)?](#)

오리건 주 ACLU [배경 자료 언론의 자유 논문](#)

[오리건 주의 언론의 자유](#)

Pew Research Center의 [미국인과 '캔슬 컬처'\(Americans and 'Cancel Culture'\) : 어떤 이들은 책임성의 요구로 보는 것을 다른 이들은 '검열, 처벌로 보는 것\(Where Some See Calls for Accountability, Others See Censorship, Punishment\)](#)

Race Beat: 언론, 민권 투쟁, 그리고 국가의 자각(The Press, the Civil Rights Struggle, and the Awakening of a Nation), Gene Roberts, Hank Klibanoff 공저

ⁱ 미국 헌법 수정 1조(The First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또는 언론의 자유, 또는 언론, 출판의 자유, 또는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권리 및 고충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ⁱⁱ 그리고 오리건 주 헌법 제1조 § 8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의견 표현을 제약하거나, 그 주제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말하거나, 쓰거나, 출판할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통과시킬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러한 권리의 남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ⁱⁱⁱ <https://www.mtsu.edu/first-amendment/article/819/securities-and-exchange-commission>

^{iv} 사실이 아닌 발언을 통해 누군가의 양호한 평판을 훼손하는 것. 이것은 법적인 정의가 아닙니다.

^v [https://www.law.cornell.edu/wex/new_york_times_v_sullivan_\(1964\)](https://www.law.cornell.edu/wex/new_york_times_v_sullivan_(1964)); 또한 [New York Times v. Sullivan Podcast](#)

^{vi} *Watts v. United States*, 394 U.S. 705 (1969),

<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394/705/>; *United States v. Keyser*, 704 F.3d 631, 638 (9th Cir. 2012); *United States v. Bagdasarian*, 652 F.3d 1113, 1118 (9th Cir. 2011)

^{vii} *Brandenburg v. Ohio* (1969), <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395/444/>

^{viii} “임박한 무법적 행동을 조장 또는 야기하는 것을 의도한,” *Brandenburg v. Ohio* (1969)

^{ix} “그러한 행동을 조장 또는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Brandenburg v. Ohio* (1969)

^x *Alliance for Community Media v. FCC*, <https://law.justia.com/cases/federal/appellate-courts/F3/56/105/623915/>

^{xi} <https://news.winona.edu/insights/the-nature-of-free-speech-and-responsible-speech/>

^{xii}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이용 약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저희 기관의 [독성 금지 가이드\(Anti-Doxing Guide\)](#)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xiii}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ACLU)의 At Liberty 팟캐스트 |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Ask an Expert): 언론의 자유란 무엇인가(What Is Free Speech)?<https://www.aclu.org/podcast/ask-an-expert-what-is-free-speech>

^{xiv} <https://www.law.cornell.edu/supremecourt/text/432/43>

^{xv} <https://law.justia.com/cases/oregon/supreme-court/2008/s055085.html>